

‘연동형 비례’ 선거법 통과되면 군소 정당 난립?

정치권 일각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노리는 정당들이 난립할 것이란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대한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실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23일 한국당을 제외한 범여권 ‘4+1’의 선거제 협상을 비판하면서 “총선 전까지 예상하기로는 100개 정당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투표율만 1m가 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약 4개월 정도 남은 총선 전까지 100개나 넘는 정당이 등장할 것이라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일축한다.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과 앞으로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정당을 감안할 때 아무리 많아도 50개 이하일 것이라 분석이다.

등은 과거에 존재했던 당명을 특정이 되살려 등록한 경우다.

현재 창당을 준비하는 단계인 정당들의 이름도 다양하다. 이들은 대체로 정당명 뒤에 ‘가칭’이라고 병기해 당명을 추후 변경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유민주당 ▲부정부패척결당 ▲한민족사명당 ▲기본소득당 ▲통일한국당 ▲해나라당 ▲평화통일당 ▲비례한국당 ▲국민의힘 ▲정민당 ▲소상공인당 ▲자유당 ▲대한신당 ▲미래를향한전진4.0 ▲새로운보수당 ▲국민소리당 등 16개로 나타났다.

이처럼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 34개와 창당 준비단계인 정당들이 총선 전 모두 창당하고 후보를 낸다고 가정할 때 겨우 50개가 된다. 한국당의 “100개 정당을 낼 수도 있다”는 예상이 현실적으로 과장된 것이라 근거는 여기서 나온다.

중앙선관위 등록 정당 34개, 현재 창당 진행 중 16개 국가혁명배당금당, 인권정당, 부정부패척결당 등 다양 정당등록 기본요건, 봉쇄조항 등으로 난립 가능성 낮아

실제 광주매일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정당은 25일 기준 34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이 1명 이상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등 7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27개는 이른바 원외정당이다. 선관위에 등록된 순서대로 명기하면 ▲가자코리아 ▲공화당 ▲국가혁명배당금당 ▲국민새정당 ▲국민참여신당 ▲국민행복당 ▲국민희망당 ▲국제녹색당 ▲그린불교연합당 ▲기독당 ▲기독자유당 ▲노동당 ▲녹색당 ▲대한당 ▲대한민국당 ▲민중민주당 ▲새누리당 ▲우리미래 ▲인권정당 ▲자유의새벽당 ▲친박연대 ▲통합민주당 ▲한국국민당 ▲한나라당 ▲한누리평화통일당 ▲한반도미래연합 ▲홍익당 등이다.

이름만으로는 정당의 창당 취지를 쉽게 알 수 없는 것들도 적지 않은 반면 종교적 색채나 이념적 스펙트럼을 분명히 드러낸 정당도 다수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다육이, 중앙선거관리위에 정식으로 정당 등록을 하려면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고 있어야 하며 ▲각 시·도당마다 1천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본요건을 충족시켜야 해 창당준비위 단계에서 실제 창당으로 올라서기가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비례대표제의 이른바 ‘봉쇄조항’도 군소정당들의 난립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봉쇄조항’은 비례대표제에서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우리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득표율 3% 이상이거나 지역구 5석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 봉쇄조항은 범여권 ‘4+1’의 선거제 협상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호남대 심연수 교수는 “독일의 경우도 정당득표율 5% 이상이거나, 지역구 3석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봉쇄조항을 두고 있다”면서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군소정당들이 다소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수기자



‘은 세상에 자비와 은총을’

성탄절인 25일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도 아기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사랑과 평화를 염원하는 행사들이 펼쳐진 가운데 광주 북구 임동성당 미사에 참석한 신도들이 ‘은 세상에 자비와 은총을’을 기원하고 있다. /김대기자

GGM 공장 오늘 첫 삽... ‘광주형 일자리’ 시동

기공식 노동계 불참 소식 반쪽 행사 우려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의 ‘광주형 일자리’ 첫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자동차 공장 건립이 시작된다. 하지만 광주형일자리란 축인 노동계가 불참을 예고하면서 본래 취지를 빚겨가간 반쪽짜리 행사가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는 26일 빛그린국가산단 일원에서 자동차 공장 기공식을 연다. 이날 기공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일

자리위원회 비롯한 중앙 부처와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시민단체, 주주 등 지역 인사들이 참석한다. 이들은 광주형일자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첫 삽을 뜨는 퍼포먼스로 그 시작을 알린다.

다만 광주형일자리를 합의해 끌어갈 노사민정의 한 축인 노동계가 불참을 예고해 의미가 퇴색하게 됐다. 시는 이용섭 시장과 조인철 경제부시장이 거둬기 자회견을 갖고 동참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누구보다 이 순간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노동계의 행사 불참 소식에 우리 모두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며 “긴밀한 연대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는 시장으로서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며 착공식 참석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측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이 시장이 윤종태 한국노총 광주전남본부 의장을 직접 만나 참석을 요청했으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회에서는 ‘광주형일자리’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노동존중·사회연대”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한 시민모임은 26일 오전 광주형일자리 4대의제 실행 촉구 결의대회를 통해 노사책임경영 실현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현대차 투자협약 완성차 공장인 광주글로벌모터스가 들어서게 될 빛그린산단은 함평군과 광산구에 걸쳐 있는 만큼 지난 23일 협의를 통해 건축을 허가하면서 착공에 필요한 행정 절차는 모두 완료됐다. /김대기자

21대 총선 광주·전남 선거구 19개로 늘듯

순천 2개로 분구, 여수갑·을 유지 예상

여야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될 경우, 광주는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여수갑·을은 현행 유지되고 순천시가 2개로 분구될 것으로 보여 광주·전남의 21대 총선 선거구는 지난 20대보다 1개 늘어난 19개가 될 전망이다.

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 ‘4+1’ 협의체는 지역구·비례대표를 각각 253석과

47석으로 유지하고 연동투표율 50%로 하는 내용 등의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경기 군포갑·을, 안산 상록 갑·을 및 단원갑·을, 서울 강남 갑·을·병을 각각 폐합하고 ▲전남 순천시, 세종시, 강원 춘천시 등 각각 2개 지역구로 분구하는 확정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전 15개월

전 인구기준으로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2:1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31일 대한민국 인구(5천182만6천287명, 총선 15개월 전)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거구 상·하한 구간은 13만6천565명~27만3천129명이다.

이를 실제 선거구에 대입하면 인구 분포상 전북 김제·부안의 인구(13만9천470

명)가 하한선으로, 이곳 인구의 2배(27만8천940명)가 상한선으로 설정될 수 있다.

광주의 경우 동구 9만4천244명, 서구 30만3천597명, 남구 21만7천472명, 북구 43만9천161명, 광산구 40만4천734명으로 나타났다.

동구는 인구하한선에 미달하지만 남구와 합치게 되면 31만1천716명으로 현행처럼 2개 선거구로 유지되는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서구, 북구, 광산구도 현행대로 각각 2개의 선거구를 유지하더라도 인구하한선을 훌쩍 넘어 광주의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된다.

▶2면에 계속 /김진수기자

에너지를 심어 자연을 가꿉니다

신·재생 에너지인 풍력발전은 한대(2MW)당 30년생 소나무 약 30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보입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일이 더이상 자연을 해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신·재생 에너지 사용으로 자연을 가꿔 나갈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 컨퍼런스 [2019 세계재생에너지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주최국으로, 재생에너지의 글로벌 확산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 본 광고는 [2019년 에너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대수님의 작품을 재구성하였습니다.